

이 자료는 3월16일(목) 11:00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례브리핑 모두 말씀

2006. 3. 16(목)

1. 2월 중 고용동향 / 1
2. 양극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 7
3.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13
4.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 16

## 재 정 경 제 부

### 1 2월 중 고용동향

□ 먼저,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중 고용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

□ 2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2.7만명 증가하여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음(1~2월 평균 36만명)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폭이 다소 커졌으며, 서비스업중 도소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음식숙박업이 소폭 감소 전환됨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4.1%를 기록하여 2월 실업률로는 200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으며, 청년실업률은 0.3%p 하락한 8.7%를 기록하였음

○ 실업률이 비교적 크게 하락한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험준비 등에 따라 구직활동이 감소하여 경활인구 증가폭(+29만명)이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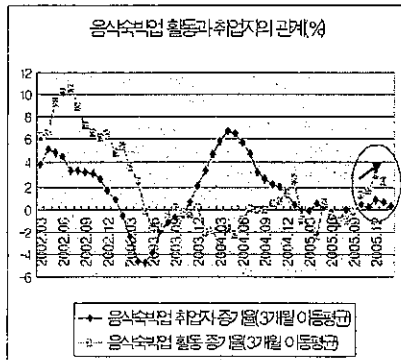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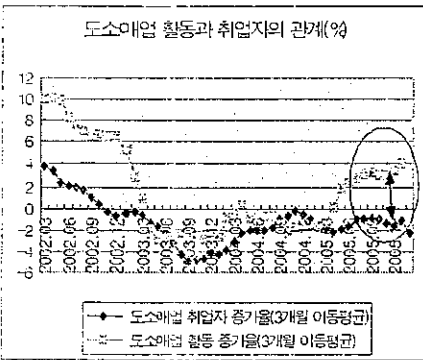
<산업별 동향>

□ 서비스업 취업자는 37.3만명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음

○ 다만, 서비스업중 가장 비중이 큰 도소매업의 감소폭이 커지고(△5.4만명), 음식숙박업이 5개월만에 소폭 감소(△0.5만명)로 전환됨

- 도소매업의 경우 작년 2/4분기 이후 활동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신업태의 확대로 영세 유통부문에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 음식숙박업의 경우, 최근 활동지수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 왔고 2월중 감소폭도 크지 않아 내수 회복의 진행에 따라 고용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05.1/4	2/4	3/4	4/4	12월	06.1월
*서비스업 활동(전년동기비, %)	0.8	2.4	5.4	5.8	6.5	6.9
-도소매업 활동	△1.3	2.3	3.2	3.4	4.1	3.7
-음식숙박업 활동	△1.3	△0.6	△0.1	3.0	4.5	1.6

② 제조업은 7.1만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이는 전반적인 생산호조에 불구하고 고용비중이 큰 반도체 이외의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 활동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05.1/4	2/4	3/4	4/4	12월	06.1월
*산업 생산(전년동기비, %)	3.5	3.5	7.1	10.3	11.3	6.4
(반도체 제외)	1.2	1.7	2.4	3.6	4.2	△0.6
*대기업 생산(전년동기비, %)	7.8	5.7	10.8	14.6	14.9	10.8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	△3.8	△0.4	1.5	3.6	4.7	△1.0

③ 건설업은 기저효과(05.2월 : △9.6만명)와 비교적 양호한 날씨의 영향으로 4.0만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 하였음

	05.1/4	2/4	3/4	4/4	12월	06.1월
*국내 건설기성(전년동기비, %)	1.9	9.6	3.8	6.9	6.5	4.6

④ 농림어업은 1.3만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 조사대상주간중에 기상여건이 양호한 편이었고, 작년 동월에 농림어업 취업자가 크게 감소(△9.4만명)한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조사대상주간중 날씨>

		수원	대전	광주	마산
05.2월	평균기온(°C)	2.1	2.2	4.0	4.6
	강수량 및 적설량 합계(cm)	13.4	33.8	32.7	28.5
06.2월	평균기온(°C)	1.0	2.0	3.7	5.1
	강수량 및 적설량 합계(cm)	10.0	20.0	26.1	11.0

<종사상 지위별 및 근로시간별 동향>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변동을 살펴보면, 비임금 근로자보다는 임금근로자 위주, 임금근로자중에서는 상용근로자 위주의 증가세가 지속됨

-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를 반영하여 자영업주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달에 이어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가 증가하였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전년동기비)

	05.1/4	2/4	3/4	4/4	06.1	2
계	14.2	38.2	37.9	29.3	39.3	32.7
비임금근로자	△9.9	1.1	7.4	4.6	0.2	△4.1
-자영업주	2.2	7.5	9.6	5.8	△0.3	△2.1
-무급가족종사자	△12.1	△6.4	△2.1	△1.2	0.6	△2.1
임금근로자	24.2	37.1	30.5	24.7	39.1	36.8
-상용근로자	34.3	35.0	27.4	20.3	26.3	25.7
-임시근로자	△9.9	△8.7	△1.3	9.6	7.8	3.8
-일용근로자	△0.2	10.9	4.4	△5.2	5.0	7.3

□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36~44시간 근로자 중심의 증가 흐름이 지속되었고, 장기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당평균 취업시간은 최근 고용회복 흐름에 따라 2개월 연속 증가(+0.1시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

(단위 : 만명, 전년동기비)

	05.1/4	2/4	3/4	4/4	06.1	2
계	14.2	38.2	37.9	29.3	39.3	32.7
1-17시간	20.4	3.1	1.0	4.1	△7.9	△12.6
18-35시간	21.2	△12.8	44.1	8.1	△4.2	△7.1
36-44시간	25.5	△30.3	68.0	71.9	55.8	70.9
45-53시간	△27.3	27.5	△17.9	△0.8	7.4	10.1
54시간 이상	△32.5	49.7	△58.9	△52.3	△6.3	△20.8

<주당평균취업시간>

(단위 : 시간)

	05.1/4	2/4	3/4	4/4	06.1	2
주당평균취업시간	47.5	49.5	46.9	48.2	47.1	47.4
(전년동기비 증감)	△1.2	0.5	△1.1	△0.8	0.1	0.1

<평가 및 전망>

□ 2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추세적 전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임

- 연간으로는 상반기 30만명대 초중반 수준, 하반기 40만명 내외의 上低下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연구기관의 2006년 고용 증가 전망치 : (노동연, 06.3월) 40만명 내외, (삼성연, 06.3월) 33~40만명

<참고>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만명)

	05.2	3/4	4/4	10	11	12	06.1	2
합 계	8.0	37.9	29.3	28.4	38.9	20.5	39.3	32.7
농림어업	△9.4	3.2	△3.6	△2.8	1.3	△9.1	△4.4	△1.3
제조업	△1.8	△7.8	△7.7	△8.1	△10.7	△4.1	△5.1	△7.1
건설업	△9.6	4.7	△3.2	△1.1	△0.6	△7.8	1.4	4.0
서비스업	27.8	37.6	43.6	40.4	48.9	41.5	47.6	37.3
전기·가스·수도업	△0.2	△0.2	0.1	△0.1	△0.1	0.6	0.4	△0.4
도소매업	△6.3	△3.1	△5.9	△5.6	△6.7	△5.5	△0.4	△5.4
유식숙박업	△1.7	△0.5	1.7	2.8	1.0	1.5	1.7	△0.5
운수업	2.0	1.3	1.2	1.2	2.3	0.1	0.3	0.8
통신업	1.5	3.3	3.9	2.8	4.3	4.7	4.4	3.9
금융·보험업	△1.3	1.1	3.8	2.7	4.5	4.2	5.4	5.4
부동산및임대업	1.2	5.8	6.5	6.0	7.3	6.1	5.8	5.2
사업서비스업	11.3	8.6	6.9	8.1	6.7	5.8	8.9	8.0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행정	△0.4	1.8	3.4	1.8	6.9	1.5	2.0	3.0
교육서비스업	4.7	7.2	10.5	10.5	10.1	10.8	10.9	10.2
보건·사회복지업	5.6	4.1	4.7	3.1	5.1	6.1	5.3	3.8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1.6	4.8	4.7	5.6	4.6	3.9	3.3	1.3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12.1	1.6	1.5	0.9	2.0	1.7	0.3	2.1
가사서비스업	△1.3	1.7	0.8	0.9	1.0	0.4	△0.5	0.1
국제 및 외국기관	△0.1	0.1	△0.2	△0.1	△0.1	△0.3	△0.2	△0.2

2 양극화 대응정책 추진현황

□ 참여정부는 경제양극화를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양극화 완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양극화는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나, 금년중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이를 위해,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제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1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근로를 통해 몇몇하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임

□ 정부는 금년에 35~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

○ 우선, 경기회복 기반을 공고화함으로써 잠재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간 부진했던 내수 회복이 강화되도록 하여 고용효과를 높여 나가겠음

○ 특히, 성장여력이 큰 서비스산업과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에 산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엄정한 평가와 사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을 효율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

□ 한편,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비정규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음

## ② 교육투자 및 능력개발기회 확대

□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및 능력개발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세계화·정보화 추세 속에서 평생에 걸쳐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식 및 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과제임

□ 정부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가계의 비용 부담 능력을 감안한 차등적 지원을 통해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에 의한 교육격차를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넓혀 주고 있음

\* (취학전)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05) 8만1천명 → (06) 14만2천명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05) 5만1천명 → (06) 15만5천명  
(초·중·고) 방과후학교를 학생의 40%(313만명)가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  
(고등교육)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05)연 30만명 → (06)연 50만명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Work-Study): (05)연 4천명 → (06)연 5천명

□ 아울러,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school to work, work to school) 원활한 이행을 통해 직장과 학교를 오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열린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

- **실업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직업훈련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학교내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 특성화고 확대: 현재 73개의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로 확대
- \* 협약학과: 실업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
- \* '진로와 직업' 교과 개설, '초중고 대학생용 직업지도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 이와 함께,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비정규직 수강지원금 지급비율(80%→100%) 인상 등 훈련우대,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확대(05년 47개→06년 60개) 및 학습조직화 지원, 영세자영업자 전직훈련 실시(06년 5,000명, 60억원) 등

### ③ 사회안전망 확충

- 한편, 정부는 개방과 경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낙오되는 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143만 → 162만명)하고, **의료급여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 18세미만 아동(06년), 임산부(07년), 장애인(09년)

-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사업 확대와 주택전세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 매입임대 : 연간 2,000호 → 연간 4,500 (15년까지 총 5만호) 공급
- \* 전세임대 : 연간 1,000호 (15년까지 총 1만호 공급)

- 이와 함께, **가구원의 사망·실직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금년 3.24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등의 선보호조치
- ☞ 지원내용 :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기준 70만원)를 1~4개월까지 지원, (의료비) 최고 300만원을 2회까지 지원가능

-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를 확대**(6→7만명)하고, **근로소득지원세제도(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근로와 연계된 지원정책(workfare)을 강화**하고 있음

- \* 07년 1단계 도입을 목표로 06년중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및 관련입법 마련

####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이들 간에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지난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를 통해 성과공유제, 공동기술 개발 등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였음

\* 성과공유제,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교류제, 수급기업펀드조성, 상생협력촉진법률 제정 등

□ 금년에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음

\* 하위법령 제정,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의 확산, 유통분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3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그동안의 제도개선 노력>

□ 정부는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재정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 재정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효율화 및 활성화 정책(05.4,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 특히, 금년 1월에는 최초의 20년물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음

\* '06년 국고채 발행량의 10%인 6.6조원 범위내에서 발행

○ 최저가 낙찰제 확대(500억원이상 사전심사대상 → 300억원이상 모든공사) 등 정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05.12)하고,

○ 회계별로 구분 관리하던 재정자금을 통합 관리(05.7 시행)함으로써 유휴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음

\* 05년 627억원의 한은 차입금 등 외부조달자금 이자 절감 효과 발생

□ 국유지관리 분야에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지난해 최초로 국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조기 완료 추진(당초 07년 → 06년)

○ 민간 위탁관리기관을 통한 국유지 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남대문세무서 부지(1220기공)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와 함께,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시스템을 강화하였음

○ 주요 사례로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그 결과를 수혜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SMS)하는 서비스를 도입(05.3)하였고,

\* 06.2말까지 일일 약 2천건 총 30만건 서비스

○ 복잡·난해한 회계예규·통칙을 유형별로 통합·축소(총 69개 → 19개로 축소)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05.12.30부터 시행)하였음

○ 국가채권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국가채권 관리백서」를 최초로 발간(06.1)하였으며

○ 정부결산 일정을 단축(예산회계법상 국회제출일 9.2까지 → 7.27일 제출)하여 국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과 결산간의 연계성을 제고하였음

\* '02년 결산 : 8.29일 제출, '03년 결산 : 8.6일 제출

## <앞으로의 과제>

□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운영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 재정상황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리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08년 목표)을 추진 중이며,

- 이를 위해 금년에는 「국가회계법」 제정(06년)을 추진하고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용을 실시(05년 12개 부처)할 계획

○ 아울러,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유재산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확대할 방침

- 국유지 실태조사 결과를 Data Base로 구축하는 한편,

- 국유재산 전산시스템과 지적(地籍)관리시스템(행자부)을 연계하고,

- 임대 및 매각 자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사진 등)를 On-line\*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OnBid'(자산관리공사)

□ 이와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 금년 중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

\* 「국가채무관리효율화방안」을 발표(05.10)하고 연구용역 실시(06.2 연구용역완료,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이화여대 전주성교수)

□ 재경부는 '06.3.15(수) 15:00 '06년도 제1회 규제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경제부총리, 강병호 한양대 경상대학장)를 개최하여 2006년중 규제개혁추진계획을 심의

○ 재경부 소관규제로서는

- 1)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추진계획,
- 2) 외환자유화 계획과

○ 범정부적 규제개혁과제로서

- 1) 법인·공장설립절차개혁과
- 2) 무역협회의 건의과제 처리계획에 대해 논의

□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금융, 외환, 국고등 재경부 소관 규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 2005.11월에 재경부내에 신설한 위원회로서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에 이어 2차 회의였음

□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재경부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선도해 줄 것으로 당부하는 한편,

1)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관행때문에 가끔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있지 못한 점을 시정할 것과,

2)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의 신설과정에서의 심의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 앞으로도 재경부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매분기 1회)하여 규제전반에 대한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심의해 나갈 계획임

**【참고】 '06년도 재정경제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금융 분야】**

- 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추진
- 「제2단계 금융규제 개혁」에서는 규제 기능별로 접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
  - 금융업권의 영업, 지배구조 및 구조개선, 소비자보호, 금융제재 등 4개 T/F를 구성하여 기능별 규제 중점 정비
  - \* 민관합동의 4개 규제기능별 T/F 발족('06.2), 3월말까지 각 업권의 규제를 기능별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 진행 중
- 이와 함께, 금융업계·외국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규제개선과제도 상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 \* 지난 2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82건의 과제를 포함하여 총170여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실무검토 착수

**【외환 분야】**

-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을 마련
- 기존 외환자유화 일정을 재검토하여 대외채권 회수의무, 원화국제화 등 일부 남은 제한도 조기에 자유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06년 상반기까지)
- 해외투자의 자유화
- 해외투자 관련 규제중 남은 일반 개인 및 기업의 투자 목적용\*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하여는 외환수급 및 외환시장 동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자유화
- \*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은 전면 기 허용('05.7)

**【법인·공장설립 분야】**

- 법인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추진
- 법인 및 공장설립절차 규제개혁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선진국(예 :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를 현장조사, 비교검토
- 재경부·산자부·중기청 공동으로 '06.5월까지 법인설립절차, '06.7월까지 공장설립절차(부지확보, 사업계획승인, 공장건축, 준공 인허가 등 단계적 절차) 개혁방안\* 마련
- \* 규제개혁기획단의 법인·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04.8월, '05.5월)과 선진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여 개혁방안 마련

**【무역협회 건의과제 처리】**

- 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발굴·건의('05.12)한 제2차 규제개선 과제 22건\*의 처리
- 제1차 건의사항 처리절차를 준용,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06. 상반기까지)
- \* 분야별 : 관광레저 7, 공장설립·운영 8, 물류·유통 3, 기타 4